



한미 FTA 체결이 양극화 해소 방안인가!

- 낙농사수,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우리의 입장 -

정부는 지난 2월 3일 공청회 무산에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한미 FTA 개시를 선언하였다. 이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절차마저 도외시한 것이며 더욱이 항간에 정부당국자가 미의회 일정상 내년 3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은 한미 FTA가 얼마나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협상인가를 증명하는 척도다.

정부와 재계가 우리 농민이나 영화인의 반대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붙이면서 한미 FTA 체결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불설성이다. 한술 더 떠 충분한 사전검토나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수립은 뒷진인 반면 미국의 자동차업계 대응에 대해서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참으로 분통을 금할 길이 없다.

농경연 자료에서만 봐도 세계 농산물 최대생산국인 미국과 FTA체결시 농업부문에 있어 최소 2조에서 최고 8조 8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낙농부문에 있어 2천억을 상회하는 피해가 예상되며, 우리나라에 35배에 달하는 원유생산량과 막대한 수출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이기에 FTA체결시 우리 낙농산업은 우리 농업과 더불어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질 것이 명약 관화(明若觀火)하다.

정부는 미국과의 FTA협상에 있어 농업부문 민감품목 최대확보에 노력하겠다고는 하나 농업의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하는 미국측의 입장을 봤을 때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이 자명하며, 정부가 진정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다면 한미 FTA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다수가 이익을 보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손해를 보는 정책을 택하면 안된다는 '파레토원칙'을 차치하고라도 식량주권 포기하고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식량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하며, 농업회생, 낙농회생을 위한 대책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국가적인 사안이다. 이에 우리 낙농가족들은 350만 농민과 함께 한미 FTA저지를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을 선포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굴욕적인 협상을 중단하고 충분한 사전검토와 FTA추진을 위한 국내 절차를 보완 정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6. 3. 3

한국낙농육우협회